

STRATEGY 21

통권40호 Vol. 19, No. 2, Winter 2016

북한 비대칭 위협 대응한 한국 해군전력 발전방향*

부 형 옥**

I. 서론

II. 북한 핵 및 비대칭 위협 증대가 해군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

III. 확장된 해군 역할 수행을 위한 창의적 대응개념 및 전력발전 방향

IV. 결론

* 본 논문은 제17회 함상토론회(2016년 6월 3일)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후 발생한 북한 5차 핵실험 등의 상황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한 것임.

**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장.

I. 서론

2016년 현재 한국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핵을 포함한 북한의 비대칭 위협이다.¹⁾ 북한이 핵 능력을 앞세워 비대칭적 군사도발과 위협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는 이른바 북한의 핵 그림자(nuclear shadow) 하에 놓여 있다. 북한 핵 위협이 증대되면서 북한의 생물학 무기, 화학무기, 특수부대, 전방전개 공군, 잠수함(정), 장사정포 및 미사일 전력, 사이버 위협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은 최근 들어 급격하게 북한에게 유리하게 이행되고 있다. 그동안 막대한 국방재원을 투입해 첨단 재래식 전력 건설에 매진해왔음에도 여전히 북한 위협에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는 안보현실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해군이 처한 상황도 전반적인 한국 국방이 처한 상황과 유사하다. 우리 해군은 북한 해군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양보다는 질 위주의 군사력 건설을 추진해왔고, 결과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수중전력에서의 양적 열세, 기뢰전 위협에 대한 대응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북한 해군과 싸워서 지지 않을 수준의 전력을 건설했다. 그러나 한반도 위기상황이 한국 해군 대 북한 해군의 대결로 수렴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닌 만큼 북한 해군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에 있어 어느 정도 낙관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서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바다에서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직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이 제기하는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에 있어 우리 해군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진행되어왔다. 북한 핵에 대한 대응에 있어 한국군 자체적인 능력 확보로 고려되는 것이 킬체인(Kill-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한국형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인데 이들 전력의 대부분은 지상군과 공군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핵 이외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해군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미진했다. 최근 들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 여기서의 비대칭 위협은 북한이 보유한 '비대칭전력'을 의미한다. 비대칭 전력이란 상대방은 보유하지 않거나 상대방보다 현저히 많이 가져서 전쟁을 불균형하게 만드는 수단의 능력으로서 한국군에 대하여 북한군이 보유한 비대칭전력은 핵무기, 화학무기, 미사일, 장사정포, 특수전력, 잠수함/정, 전방전개 전투기, 사이버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위협이 제기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잠수함 작전의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해군의 역할이 부각되는 것은 그나마 소망스러운 일이다.

2016년 한반도 안보 상황은 보다 적극적인 해군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해군이 보여주었던 북한 해군 위협에 대한 대응 위주의 태세에서 벗어나 보다 공세적이고 전략적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전장상황에 해군이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할 모색이 필요하다. 북한의 전략표적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 참수작전에서 해군의 역할을 높여 전쟁의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해군전략의 중점이 해양에서(on the sea) 싸우는 것보다 해양으로부터(from the sea) 전력을 투사하여 합동작전의 성공적인 수행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행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와도 연결된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핵능력의 고도화로 북한 비대칭 위협의 심각성이 전반적으로 고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북한 핵에 대응하는 국방차원의 전략에 있어 해군의 역할 공간을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해군이 증강할 필요가 있는 전력과 군사력운용에 있어서의 창의성을 주장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비대칭 위협이라는 것이 상대가 가지고 있지 않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측면에 집중하면서 제기되는 것이므로 비대칭성에 대한 대비방안은 창의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북한 핵의 고도화 때문에 야기되는 전략상황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에 있어서 해군의 역할확대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한다.

Ⅱ. 북한 핵 및 비대칭 위협 증대가 해군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

북한은 현재 핵무기 소형화와 이를 미사일에 탑재하는 능력을 거의 확보한 상태에 있다. 지금 당장은 완성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그 방향으로 정책 노선을 결정한 만큼 조만간 핵을 탑재한 미사일 위협은 현실화될 것이다. 향후 한국군은 핵을 보유한 북한에 재래식 전력으로 상대해야 하는 부담을 지니게 되었다. 물론 북한 핵 억제는 미국의 핵 확장억제에 의존하는 것

이기 때문에 북한 핵이 제기하는 위협 전부를 한국군이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장 핵 전략가인 리버와 프레스가 경고하듯이 북한이 한국에 대한 핵 공격 시에도 미국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핵 보복을 통한 문제 해결 보다는 첨단 재래식 전력을 활용한 문제해결을 선호할 수도 있다.²⁾ 이러한 상황은 한국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이다.

동맹국으로부터 제공받는 핵 우산의 신뢰성에 대한 불신은 디커플링(decoupling)의 문제로 많이 논의되었으며, 과거 영국과 프랑스를 핵개발의 길로 나서게 한 단초가 되기도 했다. 우리 손에 핵무기가 있지 않고 동맹국의 손에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핵 보복을 가하지 못한다는 문제는 억제전략의 구현과 군사전략의 유연성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에 의존하더라도 일정부분 독자적 보복능력을 구비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여기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재래식 보복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논의가 의의를 갖는 것이며, 해군의 역할도 지금보다 확장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된다. 아무튼 이러한 모든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북한 핵능력 고도화가 조성하는 전략적 문제부터 고찰할 필요가 있다.

2) 북한 정권에 의한 핵 사용이 명확한 경우에도 미국은 핵을 사용할 수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된다. 리버와 프레스 교수는 전면전 발발 시 북한은 핵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미국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딜레마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상황은 북한의 핵사용에 대해 군사작전의 중지를 결정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숫자를 감안하면 후속적인 핵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결정이 가지는 이점은 충분하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미국이 주도해온 NPT 체제와 미국의 핵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기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상황은 북한 수뇌부를 겨냥하여 핵 보복을 감행하는 경우이다. 이는 미국의 핵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신호로 작용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가 은신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도시에 핵을 사용하는 것은 비전투요원의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민간이 피해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를 처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북한 지도부는 핵공격을 피할 수 있는 지하의 견고화된 은신처에서 계속 전쟁지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지역 대도시에 대한 핵 보복은 북한 주민들의 한미동맹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내부적 단결을 가능케 할 수도 있다. 세 번째의 경우는 재래식 군사작전을 지속하면서 평양으로 진격하는 상황이다. 이는 핵 보복으로는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을 성공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평양을 점령하여 북한 지도부를 색출하는 것이 전쟁의 조기 종결에 효과적인 것이라는 논리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 또한 북한의 제2, 제3의 핵공격에 한국군과 한국민을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핵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네 번째 상황은 북한 핵시설을 무력화하기 위해 군사표적에 대한 핵보복을 감행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핵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북한의 핵시설이 지하화 되고 견고하게 구축된 시설에 위치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핵 보복으로 이를 불능화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핵 보복으로 비전투요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더 나쁜 소식은 북한은 이에 대응하여 제2, 제3의 핵공격을 감행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1. 북한 핵능력 고도화가 조성하는 전략적 문제

재래식 전력에서 한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함을 감지한 북한은 전반적인 군사력 균형을 북한에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핵개발 및 비대칭 전력 건설에 매진했다. 이는 과거 냉전기 미국이 유럽 전구에서 재래식 전력에서 소련에 열세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취했던 전략과 유사하다. 나토 동맹국에 대한 소련 지상군의 침탈을 저지하기 위해 미군은 유럽 전구에서 지상전이 발발하면 지상전으로 대응하되 전술핵을 사용한 확전을 고려하고, 상황 불리 시에는 전략핵을 사용한 전면적 핵 전쟁을 상정하였다.

한반도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한미동맹은 양적으로 우세한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전술핵을 사용하려 했다. 북한군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전술핵을 사용하는 것은 전력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이 되었다. 이러한 전쟁수행 개념은 1992년 미국이 전술핵을 철수시키기 전까지 유지된다. 이후 냉전종식이라는 전환기적 상황, 유일 초강국으로서 미국의 군사적 자신감, 70-80년대 지속적으로 진행된 한국군의 전력증강, 당시 한국정부의 정책선택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전술핵 철수가 단행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전술핵을 철수하더라도 한반도에서 군사력 균형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전술핵 철수 이후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은 북한의 장사정포, 전방전개 공군 등을 활용한 수도권에 대한 화력 집중능력과 이에 대한 한미연합전력의 보복능력이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다른 요인이 추가될 수 있지만 이것이 지난 20여 년간 한반도에서 쌍방 간에 대규모 군사작전 발생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꼽힐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력 균형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로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다. 북한은 2016년 9월 5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20여 년에 걸쳐 핵능력 고도화를 진행했고, 어느 정도 자신감을 확보한 북한은 노골적으로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핵을 무기화하는 것이 임박해지면서 새로운 전략적 문제가 대두되었다. 과거 파키스탄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서 인도와의 분쟁에서 보다 공세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과 유사한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을 ‘핵 그림자 전략’으로 설명하는 이도 있고, 북한이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는 한반도의 상황을 무장정치(armed

politics)³⁾ 개념을 빌어 설명하는 노력도 있다.

한편 전시에 북한이 공세적 핵운용전략을 채택할 것이라는 전망은 여러 학자들이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이 전제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너무나 파괴적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군사작전이 발생하는 상황은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는 다른 것이다. 즉 한반도에서 전면적 군사작전이 발생하는 상황은 충분히 예견되며, 이때 북한은 매우 공세적으로 핵을 사용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주장을 보다 집약해서 설명하자면 북한은 재래전에서의 패배를 예상하고 있고, 그 패배의 대가가 카다피나 후세인의 경우와 유사하거나 더 참혹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공세적인 핵운용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⁴⁾

이러한 평가에 근거하면 훗날의 역사가들은 2010년대를 기점으로 남북한 간의 군사적 갈등양상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할 것 같다. 즉 북한 핵이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을 깬고, 북한은 공세적 핵운용 전략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므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수준은 필연적으로 과거와 질적으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2 북한 핵능력 고도화와 비대칭위협 심각성 증대

핵무기 완성 단계에 진입하면 군사적 자신감에서 더욱 과감한 군사도발을 감행한다는 것이 파키스탄의 사례에서 알게 된 사실이라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앞으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6차 핵실험 카드를 계속 유효하게 활용하는 한편, 그 밖의 다양한 도발을 통해 위협의 강도를 높일 것이다. 사이버 공간 및 인지영역에서의 심리전도 수행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 및 SLBM 관련 뉴스를 의도적으로 외부로 공표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3) 무장정치의 개념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술한다.

4) 리버와 프레스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강압적 핵운용교리(coersive nuclear doctrine)을 추구할 가능성을 분석하면서 두 가지 요인을 검토했다. 즉 1) 재래식 전쟁에서의 패배 가능성, 2) 패배가 초래할 결과의 심각성의 기준이 그것이다. 현재의 미국, 영국, 프랑스(어느 국가와의 전쟁 불문), 인도(대 파키스탄전 가정), 이스라엘(대 시리아 또는 이집트전 가정)은 재래전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낮다. 냉전기의 나토(대 바르샤바조약기구와의 전쟁), 파키스탄(대 인도 전), 북한(한미연합전력과의 전쟁), 발틱 나토국(대 러시아전), 러시아(대 나토전), 중국(미국과의 전쟁)은 재래전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패배의 결과가 초래하는 심각성은 이스라엘(genocide까지 우려), 냉전기의 나토, 파키스탄, 북한, 발틱 나토국, 러시아, 중국(패배의 정치적 부담 심대)에서 매우 크다고 보았고, 이들 국가들은 패배의 결과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강압적 핵운용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재평가되어야 한다. 핵·미사일 위협 외에 무인기 위협을 부각시키고 스마트폰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는 사이버 위협을 부각시키며, 300미터 방사포 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위협을 증대시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을 향해 북한이 활용하게 될 주요 도발 수단은 비대칭적 수단이 될 것이다. 쉽게 대응할 수 없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날로 진화하는 북한 군사위협에 대한 공포심을 증대시키고 한국군 대응 능력을 흠집 내거나 무력감을 확산시키려는 목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에서 에밀 심슨(Emile Simpson)이 주장하는 ‘무장정치’(armed politics)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우려케 한다. 심슨(Simpson)(2012)은 기존 무장정치 개념, 즉 무장그룹의 무력 사용으로 초래되는 국내 정치의 왜곡 현상을 국제 수준으로 확장하여 국가 간에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필자는 무장정치를 추구하는 북한이 한반도를 전쟁과 평화가 뒤섞인 회색지대로 만들려 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때 북한이 활용하리라 예상되는 것이 그들의 비대칭 전력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북한의 핵 그림자 하에서 그들의 비대칭전력을 활용한 고도의 무장정치의 현실화가 앞으로 한반도 안보의 화두가 될 것이다. 그동안 남북한이 휴전 상태에 있었기에 향후에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상태로 있어왔지만 앞으로 펼쳐질 한반도의 안보지형은 과거보다 더 악화되는 수준에서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상황’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일을 회고해 보면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한국은 북한핵에 대응하기 위해 킬 체인과 KAMD를 추진했지만, 북한은 SLBM을 개발함으로써 이에 대응했다. 방공망을 촘촘히 구축했지만 무인기로 돌파했고, 첨단전력을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해 사이버전력을 강화했다.

북한은 군사도발 이후에 유화공세를 취하는 양면전략을 구사했다. 한국 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과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기조 때문에, 북한은 그들의 유화공세에 대한 한미 양국 정부의 운신의 폭이 좁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북한은 이러한 약점을 파고들면서 사회를 분열시켰다. 향후 한반도에서 펼쳐질 상황은 지금 기준에서 본다면 전쟁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위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전선은 불명확한 상황, 어디서 어떤 형태로 싸워야 하는지 잘 정의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기존의 사고체계와 정책수단으로 대응이 가능할까?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다.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더 많은 국방예산이 투입되고 그에 따라 한국군은 날로 강성해질

것이지만, 북한은 제기되는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3. 핵 및 비대칭 위협 대응에 있어서 해군 역할 공간의 확대 필요성

북한 핵이 완성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 북한이 제기하는 비대칭 능력에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 예상됨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따라서 해군 기획자들은 북한 핵에 대응함에 있어 해군의 역할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북한이 제기하는 비대칭 능력의 시너지가 축소되고 비로소 우리의 능력으로 북한의 위협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군의 역할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해양전략가들의 주장을 한반도 현실에 적용하면서 그 정당성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마한(Mahan)은 해군력이 원래 공세적 전력이며,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격언처럼 해군은 전술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항상 공격적인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한의 주장으로부터 우리는 북한 핵 대응에 있어 해군의 공세적 역할을 도출해야 한다. 한편 콜벳은 해전과 지상전과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인식하고 지상 목표 타격에 대한 해군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콜벳(Corbett)의 이론으로부터 우리는 해군이 지상군, 공군과의 합동작전을 통해 북한 핵에 대한 억제를 구현할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끌어내야 한다.⁵⁾

마한과 콜벳의 해양전략으로부터 도출되는 해군력의 공세적 운용과 합동작전을 통한 효과극대화는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 최근 들어 소장 연구자들은 북 핵·미사일에 대한 재래식 억제전략의 발전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정섭(2015)은 핵억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우발적 사고, 인지적 오류, 핵무기 사용의 압박 등으로 인해 위기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김정섭(2015), 김재엽·김종하(2011)와 같은 연구자들은 북 핵·미사일에 대해 재래식 응징보복전략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핵

5) 이는 해군을 지상군을 지원하는 보조적 역할로 규정하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콜벳의 주장이 해군력의 보조적 역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합동작전의 중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무기로 한국을 공격할 것이 예상되면 이라크 전에서 미군이 참수작전을 실시한 것처럼 상대의 전략적 중심을 공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휘락(2013)이 최소억제개념에 의한 응징보복 전략개발을 주장하는 것도와 일맥상통한 것이다. 박휘락(2013)은 핵 억제전략의 일환으로 논의되던 최소억제(minimum deterrence) 개념의 변형된 형태를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북한 지도부는 북한지역 어느 한 도시를 핵무기로 응징보복하는 것보다 이러한 보복을 더욱 위협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 핵에 대한 재래식 억제전략의 발전을 주장하는 이들은 응징보복전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 그렇다면 응징보복은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한·미의 뛰어난 정보수집능력을 활용하고, 사이버 공격작전을 통해 감시불능상태를 조성하며, 잠수함 전력과 특수전 요원을 결합하고, 무인기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의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해군의 기획가들은 해군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응징보복 수단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한 한국군의 능력을 강화하는 다른 방법은 미사일방어능력을 확충하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해군 자산으로 고려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중간단계 요격을 위한 SM-3를 검토할 수 있겠다. SM-3의 배치에 대해 중국이 반발을 야기할 것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SM-3의 배치가 갖는 전략적 의미는 단순히 하나의 무기체계 도입의 의미를 넘는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 있듯이 동맹국 간에 ‘서로의 몸을 체인으로 묶는 전략(chain-ganging)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이 유럽에서 추진한 미사일 방어 단계·적응적 접근(EPAA: European Phased Adaptive Approach)의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⁶⁾

6) 미국 탄도미사일방어 프로그램은 오랜 역사를 지닌다. 그동안 많은 난관이 있었다. 기술과 돈 문제가 뒤따랐고, 국제정치에서 항상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었다. 지난 몇 년간 오바마 행정부가 유럽에 적용한 탄도미사일방어체제를 EPAA(유럽형 단계·적응적 접근)라고 부른다. 이는 부시 행정부의 탄도미사일방어계획의 일부를 중지하고 일부는 수정한 계획이다.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미국이 많이 양보한 계획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아무튼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에 나토 국가에 대한 이란 등 불량국가와 테러단체의 미사일 위협 고조를 이유로 미사일방어를 위한 단계·적응적 접근법(PAA)을 소개하고, 그 첫 적용대상이 유럽임을 공표한다. 이후 수년에 걸쳐 터키, 스페인, 폴란드, 루마니아 등에 탄도미사일방어체제가 배치되었다.

터키, 루마니아, 폴란드 등 유럽 각국은 미국 BMD 자산의 자국 배치를 미국이 강화된 안보공약을 제공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것이 러시아의 반발 및 반대여론 형성의 빌미가 되는 단점도 있었다. 여론 측면에서 초기에는 미국 BMD 자산 배치에 대해 비판적이었지만 대개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찬성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러시아의 현상변경 시도로 안보우려가 커짐에 따라

동북아 전략상황을 고려할 때, 해상에서 북핵에 대응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엄청난 임팩트를 가지는 사안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 시, 해군 차원에서 SM-3 도입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북한이 주요 핵 투발 수단을 - 한미 연합전력의 오폭을 유도하고, 중국에 대한 북한판 체인 무기(chain-ganging)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여 - 북·중 국경이 인접한 지역에 설치하고 (노동미사일의 경우) 고각 발사를 통하여 한국을 타격하거나 전시 증원전력으로 활용될 주일 미군 및 괌 주둔 미군에 대한 타격을 의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군사적 차원에서 SM-3 배치의 이점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해군은 이러한 전문 정보의 제공을 통해 정치권의 정책적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해군의 여건을 고려 시, 지금 당장 노력을 집중해야 할 분야는 북핵 대응에 있어서 해군 역할 공간의 확대이다. 즉 공세적인 해군전력 운용과 이를 통한 응징보복능력의 확보를 여하히 할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SM-3의 도입을 통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동맹의 의무를 다하게 하는 전략은 매우 큰 임팩트를 가지는 사안이지만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고, 그만큼 불확실성도 높기 때문이다.

한편 북핵에 대한 해군의 역할 공간의 확대는 결과적으로 북한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에도 효과적이다. 핵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핵으로 인한 북한 비대칭 능력의 시너지가 감소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북한 핵에 대해 공세적으로 해군력을 운용하는 전략은 핵 이외의 북한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에도 연결되는 것인 만큼 해군의 역량집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미국의 BMD 자산 배치에 우호적인 국내환경이 조성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일부 국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경제적 이익, 미군의 BMD 관련 기술 및 노하우 확보 등을 우호적 여론 형성에 활용했다. BMD 기지 제공 협상과정에서 각국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 것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터키는 미국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에 접근하는 전략적 스탠스를 취했고, 체코는 미국이 원안에서 후퇴한 대안을 제시하자 BMD 불참하는 결정도 불사했다.

Ⅲ. 확장된 해군 역할 수행을 위한 창의적 대응개념 및 전력발전 방향

베고(Vego)는 전시나 평시에 창의적인 지휘관과 부하, 더 나아가 국방 자체의 창의성을 얘기하지 않고 성공적인 전쟁과 군대를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많은 이들이 전쟁이라는 것이 과학이라기보다는 예술(art)에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전쟁의 역사를 살펴볼 때 혁신적 과학기술이 전쟁양상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학기술 자체만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혁신적인 과학기술과 창의적인 군사력 운용개념이 결합될 때 비로소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며 군사적 성공이 담보되어 왔다. 이를 감안할 때 국방과 창의성은 불가분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한국 국방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된 이 시점에서 창조국방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연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핵무기 완성단계에 이른 북한이 제기하는 군사적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한국 국방은 물론 해군이 당면한 최대 과제이다. 전쟁을 방지하고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에 더하여 독자적인 재래식 억제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필자는 이 과정에서 해군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해군의 역할 확대는 창의성과 결합되어야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창조국방은 국방의 여러 분야에서 구현될 수 있지만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서는 창의적 군사력 운용개념과 창의적 기술을 활용한 군사력 건설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 중 북한 핵 및 비대칭 전력에의 대응에 있어 해군의 역할을 확장하기 위한 대응개념에 대해 먼저 논의해 보자.

1. 확장된 해군역할 수행을 위한 창의적 대응 개념 모색

창의적 대응개념 논의와 관련하여 다수의 학자들은 거부적 적극 방위전략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권태영(2010)은 북한 위협(기습공격/타격능력, 특히 WMD 전력)이 크게 증가되었고, 이 위협으로부터 방호해야 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자산의 가치가 현저하게 높아졌음을 감안하여 역비대칭전략을 추구해야 함을 주장했다.⁷⁾ 즉, 수도권에는 국가의 핵심적인 고급 인력과 고가의 자산이 총집결되어 있으므로 현 전선을 양보한 후 반격을 실시하여 중국적으로서는 승리를 얻는다 해도 그 승리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현 전선 부근 또는 밖에서 단기간 내 결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전쟁을 사전에 예방·억제하는 적극방위개념의 채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비대칭전략은 북한군 비대칭 전략을 무위화할 수 있는 전략적 방편으로 인식된다. 그런데 우리 군은 북한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을 주로 정밀타격 수단의 도입과 연관시키며 논의하였다. 그러나 군사적 창의성의 견지에서 본다면 전력의 현대화만이 북한 핵 및 비대칭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시각은 문제가 있어보인다. 권태영(2010)은 전력 현대화 유일론에 융통성을 주면서 북한이 추구하는 비대칭성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군사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소수의 특징 있는 독침형 전력을 통해 전쟁도발을 억제하고 거부적 방위효과를 극대화하는 응징보복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역비대칭 전략을 고려한 창조적 군사력 건설 방향 논의의 실익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은 ‘군사력 건설이 비교적 장기적 시계(10~15년)하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임을 감안할 때, 현재적이거나 5년 이내에 당면하게 될 북한 핵 소형화 및 핵탄두 미사일 탑재와 비대칭 위협에 대응함에 있어 어떤 검토의 실익이 있는가?’라는 질문과도 연결된다.

생각건대 5년이라는 시간은 전력 건설의 관점에서 본다면 매우 짧은 기간이지만 현 시점에서 해군이 중점을 두어야 할 핵심군사능력에 대한 논의의 실익은 존재한다. 현재 한반도 군사력 균형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한 한국군의 능력 강화 방안들에 대해 우선순위 감각을 가지고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군 전반, 그리고 해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관련 논의가 북한 위협 및 불안정 상황 대비차원에서 선언적 효과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즉 북한 핵과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기존에 추진해온 전력확보 사업의 조기 완료계획 공표, 또는 기간 중 신규로 확보해야 할 군사능력을 공표하는 조치를 통해 전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7) 물론 권태영(2010)이 북한 핵 및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 차원의 역비대칭전략에 중점을 두고 논의한 것은 아니다.

북한 핵 및 비대칭 위협과 해군의 대응능력을 고려 시 향후 해군이 추구해야 할 군사능력은 다음 5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해군은 바다에서(from the sea) 북한 핵/미사일 시설 및 화생무기에 대해 정밀타격 가능한 군사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은 전쟁 발발 시 핵을 포함한 WMD 사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좌절시킬 수 있도록 300km 이상의 거리에서 발사할 수 있으며, 신뢰도가 높고 파괴 범위가 넓은 타격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들 전력은 감시·정보 획득 수단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 수준의 북한 핵 및 비대칭 전력에 대해 외과 수술식의 정밀타격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축 전력의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가 필요하다. 한국 해군이 공세적으로 전력운용을 하려면 북한 주력부대가 위치한 곳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생존성 확보는 전쟁지속능력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북한군 지대함 미사일 전력에 대한 대응 강화 및 소해작전 능력 강화도 시급하다고 하겠다.

셋째, 북한군 전쟁지도부에 대해 결정적 작전이 가능한 해군 차원의 군사능력 확보가 필요하다. 전면적 군사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초기에 문제해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 지도부를 타격하여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강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효과중심의 중심 침수작전이 가능할 수 있는 특수전 전력 확보를 추진하면서, 이들 전력을 은밀하게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레이더의 발달과 북한의 대비태세를 고려할 때, 지상 및 공중침투에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중을 통한 특수전력의 투입이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북한 전쟁지도부에 대한 침수작전은 전쟁 초기에 수행되어야 효과가 있으므로 미군의 지원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군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아축의 비대칭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바다로부터 북한 WMD를 정밀타격하거나 침수작전에 활용하여 북한군에 대한 비대칭성 확보할 수 있도록 대형 수송함·상륙함·상륙기동헬기사업을 추가확보하고, 잠수함 전력 지속 보강하여 전시 ‘결정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신뢰도 높은 지휘통제체계와 첨단전력 창출을 보장할 수 있는 군수지원 시스템이다. 상기의 전력이 안정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지휘통제체계를 보다 효율화하고 미군과의 연동체계도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효과적인 군수지원기능을 통하여 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원과 원

활한 활동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전투가 지속될수록 아군은 준비된 상태에서 전투하고, 적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투하도록 강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 공세적 해군력 운용을 위한 전력소요 도출

앞서 필자는 북한의 핵 및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창의적 대응개념과 확보해야 할 군사능력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서는 이러한 창의적 대응개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력소요의 대체적 윤곽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전력소요는 현재 해군이 보유한 능력과 확보해야 할 군사능력과의 차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것인데, 그동안 해군의 전력소요는 남북한 해군력을 비교하면서 보강이 필요한 전력을 식별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북한 해군과의 상대적 전력비교의 수준을 넘어서 북한 핵과 비대칭 전력을 대응함에 있어서 확대된 해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소요를 논의해야 한다.

한편 북한 해군과 비교했을 때 한국 해군이 우세한 분야 또는 열세에 있는 분야를 짚고 넘어가는 것은 해군 전력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논의의 실익이 있다. 먼저 우리 해군이 우세한 분야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통상 우리 해군이 북한 해군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는 부분은 원거리 대규모 해상 독립작전능력, 대규모 상륙작전능력, 대잠작전능력, 원거리에서의 해상병참선 봉쇄능력 등이다. 한편 북한 해군이 우세한 분야는 연안방어작전능력, 근거리 기습상륙작전능력, 근거리 해상병참선 교란능력, 기뢰작전능력, 수중침투능력의 양적우세 등이 되겠다.

다시 원래의 논의로 돌아와서 북한 핵 및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에 있어 해군의 역할 확장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에 대해 가장 설득력 있는 답변은 한반도 전장환경 특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반도국가 특성상 동·서해에서 비교적 짧은 사거리의 해상 화력으로 지상타격이 가능하고, 무기체계 발전으로 이것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즉 장거리 정밀타격체계의 발달로 함대지 또는 잠대지 공격으로 적의 전략적 중심을 공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또한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로 지상군, 해군, 공군 간에 막연히 받아들였던 대칭적 분담구도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담당능력과 효율성을 중시한 분담개념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군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원거리에서의 작전능력이 제한되는 북한 해군의 능력도 우리 해군으로 하여금 보다 확대된 역할을 모색할 수 있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했을 때, 북한 핵 및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에 있어 부각되는 해군력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접근 가능성면에서 분쟁 지역 접근이 타군보다 안전하다는 점이다. 북한 해군의 원거리 작전능력이 제한되고, 지대함 미사일 사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이므로 지상군과 공군에 비해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북한 핵 및 비대칭 전력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함정의 독립적이며 신속한 전개·배치 능력을 감안할 때 지상전력에 비해 기동성면에서도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공군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장거리·장시간 작전 지속능력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해군전력은 3차원적 방어가 가능하고, 대량의 공격능력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작전환경에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의 융통성이 높다. 이렇듯 다수의 장점을 지닌 해군력을 활용하여 북한의 핵 및 비대칭 전력을 무력화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큰 이점을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여 해군은 다음과 같은 작전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해양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해양으로부터 적 지상으로 군사력을 투사하여 핵 시설 및 비대칭 위협을 제기하는 전략표적을 타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함대지 유도탄과 잠대지 유도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수의 북한 잠수함이 모기지 이탈하지 못하도록 적 잠수함 예상 침투로 및 공격대기 구역에 잠복하고 있다가 파괴하는 작전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잠수함 전력은 특작부대의 은밀 침투를 가능하게 하여 잠수작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북한의 특작부대 및 상륙기습단에 대해 선제적인 공격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지스함은 적의 유도탄 공격에 대해 전구 유도탄 방어에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현재 해군은 북한 핵 및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여 상기의 작전을 수행하는 데 얼마나 가까이 가 있을까? 해군 현 전력의 능력을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건대 현재 해군은 일부 함정에 함대지, 잠대지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로 함포를 활용한 지상표적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 지상 전략표적 공격을 위한 대량의 함대지 및 잠대지 유도탄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잠수함의 수중작전 지속능력 및 무장탑재 능력에 심대한 제한이 따른다. 북한

특작부대의 기습상륙을 방어 및 격퇴할 수 있는 수단(예: 공격헬기)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도 문제다.

북한 핵 및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응에 있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핵 미사일 이동식·고정식 발사대의 파괴이다. 핵이 무력화되면 핵 이외의 비대칭 전력의 시너지는 급락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대응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핵에 대한 대응은 근본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독일과 일본에 대한 대규모 폭격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끝까지 항전한 것에서 교훈을 얻은 미국은 적국의 산업시설과 국민에 대한 ‘막대한 파괴’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핵무기 보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소련도 자신들이 1차, 2차 대전에서 독일의 공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굴복하지 않고 능력을 회복하여 끝내 승리했다는 경험에서 전승을 위해서는 통상적 수준의 대규모 폭격을 넘어서는 심대한 파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미·소는 적국 지도부와 국민의 사회-심리적 요인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도의 파괴를 위해서는 확증파괴가 요구된다고 보았다.⁸⁾ 북한도 심대한 파괴를 추구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북한에게 심대한 파괴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 재래식 수단으로도 확증파괴의 수준은 아니지만 심대한 파괴를 달성할 수 있어야 북한의 의지를 좌절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주지하다시피, 프랑스의 갈로와(Gallois) 장군은 비례억제전략을 주창하면서 프랑스가 보유한 소규모의 핵무기를 심분 활용하여 소련과 같은 핵 강대국과 공포의 균형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 즉 소련이 핵공격을 감행하여 프랑스가 초토화되더라도 프랑스는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를 확실히 파괴하겠다는 전략이었다.⁹⁾ 우리 군도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대응하여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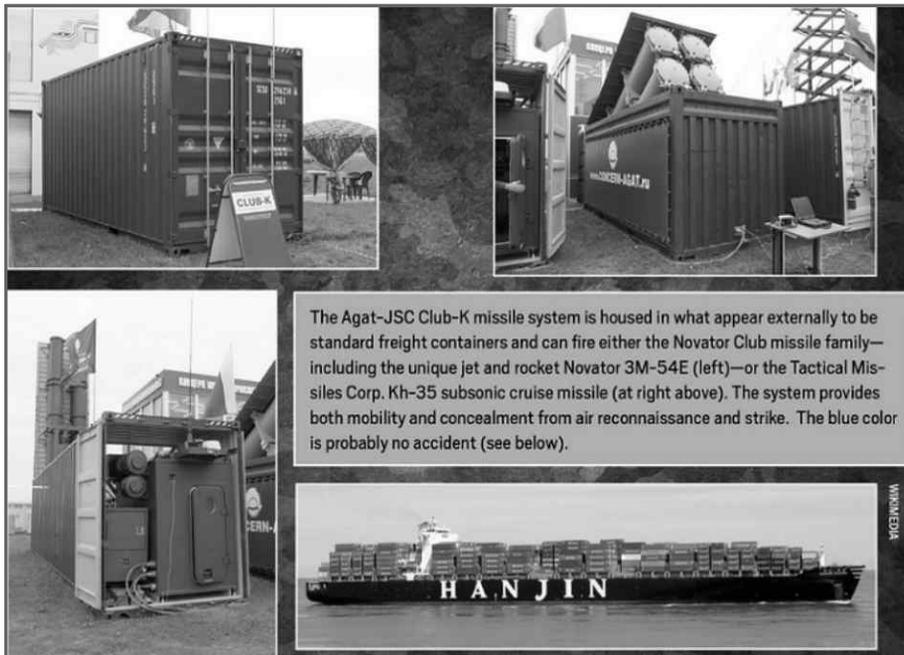
8)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소련 국민의 20%-25%를 살상하고, 소련 산업의 50%-66%를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의 핵전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후에 그는 애초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 소련 국민의 30%, 산업시설의 76%를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의 핵 능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Salman, Sullivan, Van Evera(1987)는 1987년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이 각각 선제 핵공격을 실시할 경우에도, 미국은 4436기의 핵탄두가 살아남을 것이고, 이것의 파괴력은 1411메가톤으로 평가될 것이며, 소련의 경우는 847기의 핵탄두가 살아남을 것이고, 이것의 파괴력은 532메가톤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음. 결국 선제핵공격에서 살아남은 핵탄두로 미소는 각각 상대측 사회 및 군사시설에 감내할 수 없는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피해규모와 관련하여 Daugherty, Levi, Von Hippel은 소련이 2839기의 핵탄두로 미국의 군사표적에 공격을 가할 경우, 2천만에서 3천4백만의 살상을 유도할 것으로 평가했음. 소련이 100기의 1메가톤급 핵탄두로 공격할 경우에는, 2천 5백만에서 6천 6백만의 인명이 살상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9) 엄상윤, 2011, 『북한 핵무장의 전략적 유용성과 한계』, 세종연구소.

하는 한편, 자체 능력을 활용한 북한 지도부 참수전략 또는 평양에 대한 대규모 화력 집중을 공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 핵사용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키는 조치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타군 전력에 비해 분쟁지역 접근에 안정성이 있으며, 작전지속능력 면 등에서 뛰어난 해군이 북한 핵무기를 무력화하는 데 있어 막대한 화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재래식 수단으로 막대한 파괴를 도출하기 위한 창의적인 무기체계의 예로 클럽-K 미사일 시스템과 같이 화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수단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클럽-K를 생산하는 러시아 업체(Novator Design Bureau)가 소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컨테이너형 미사일 발사대를 대량으로 상선에 적재하여 전력을 운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러시아 업체도 단지 은밀성을 강조하는 일환인 것이지 전투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컨테이너선에 미사일을 적재하여 해상발사 하는 것은 많은 취약점이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해군이 대형 수송함이나 미사일함을 활용하여 해상에서 대량으로 북한 핵 시설 및 전략표적을 무력화하는 아이디어가 비현실적이거나 실익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그림 1〉 러시아의 클럽-K 미사일체계 소개도



여기서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해상에서 북한 핵미사일 발사대를 포함한 다양한 전략표적에 대해 비교적 먼 거리에서 대량의 화력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¹⁰⁾ 당장 대규모 미사일함을 건조할 수 없다면 대형 수송함에서 적재 상태에서 바로 발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러시아 업체가 현실화시킨 이 같은 ‘창의성’을 한국 해군에서도 구현해보자는 것이다. 물론 해군의 기획가들은 클럽-K의 아이디어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해상에서, 북한의 해안포와 지대함 미사일 사거리 밖에서, 북한의 핵 시설 및 전략표적에 대해 대량의 화력을 집중시켜 막대한 파괴를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북한 핵 및 비대칭 전력을 무력화하거나 응징보복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하다. 2004년에 362사업 좌절 이후로 10년이 넘도록 원자력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논의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5년 개정된 원자력 협정에 의하면 20%의 우라늄 농축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향후 장보고-III 7번함을 핵추진으로 건조할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원자력 잠수함이야말로 장기간의 잠항능력으로 북한과의 대잠작전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전력이고, 은밀침투 능력을 활용한 다양한 응징보복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북한 핵 및 비대칭 전력 대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력이라고 하겠다.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관측이 있지만 북한 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 사회에서 핵무장 논의와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점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 대안에 비해 현실화 가능성 측면에서는 더 나은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10) 해군은 탄도 미사일을 활용하여 북한 핵과 비대칭 전력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탄도미사일이 갖는 고유의 특성에 기인한다. 탄도미사일은 특정국가에 대한 자국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탄도미사일 고유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요인이 결합되어 완성된다. 먼저 전쟁수행능력 측면에서 탄도 미사일의 주요한 역할은 적의 심장부에 대한 타격이 상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탄도미사일이 만들어 내는 피해의 가능성은 적다 하더라도 보복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매력적이다. 몇몇 제 3세계 지도자들은 미국이 자국에 대해 군사행동을 취한다면 해외의 미군기지 또는 미국 도시를 타격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한 미사일은 적의 사기를 꺾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즉 미사일 공격은 전투 초반에 적의 사기를 꺾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전쟁의 막바지에는 전승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사일 공격의 다른 이점은 적국의 인구가 곧 그들의 취약성이 되게 만들며 적국이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감소시킨다. 적의 사기를 꺾고 저항의지를 파괴하는 것도 탄도 미사일이 수행하는 주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이 탄도 미사일을 가치 있게 만드는 속성은 즉각적인 운반, 경고 거부(denial of warning), 확실한 침투 능력이며, 이는 공자가 아니라 티브를 쫓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개입의 조건을 독점할 수 있게 만든다. 이 모든 것들은 승리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해군은 대형 함정으로 원거리에서 북한의 전략표적을 대량으로 타격하고, 원자력잠수함으로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무력화하는 한편, 특전부대를 은밀히 상륙시켜 지휘부 마비 작전을 수행하는 것에도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해군 자체의 특수전 전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지상군과 합동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할 수 있겠다. 이리하여 북한 핵 및 비대칭 위협에 대한 공세적 해군력 운용에 필요한 1) 미사일 전력(Missile)의 강화, 2) 핵추진 잠수함(Submarine) 전력의 건설, 3) 특수전 전력(Special Forces) 강화는 ‘응징보복을 위한 MSS 강화전략’으로 일컬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¹¹⁾

3. 소요전력 확보를 위한 과제

위에서 필자는 공세적 해군력 운용을 위한 전력소요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북한 핵 및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는 확대된 해군의 역할을 위해서는 북한 해군에 대응하여 해상우세를 달성하려는 기존 개념하의 능력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핵 및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대량의 유도탄, 원자력잠수함, 공격헬기 또는 드론 외에 해상우세를 위해 기본적으로 해군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검토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것이다. 북한 수중세력 감시 및 초계를 위한 항공초계 능력, 네트워크 중심의 전투수행능력(체계결합, 연동성, 통합성 요구), 북한의 해안포 및 주요 지상 전략표적 공격을 위한 유도탄 공격능력, 함대공 유도탄 공격 능력, 현재보다 향상된 잠수함 능력, 확장된 소해 및 기뢰 부설 능력, 대규모 상륙부대 운용 능력, 향상된 군수지원 능력 등이 그것이다.

해군 내에서 소요를 결정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3군 간에 벌어지는 역할 분담 및 예산 투쟁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1947년 미국에서 국방성(DoD)이 설치되면서 초대장관으로 취임한 해군 출신 포레스탈 제독의 일화는 격렬한 예산투쟁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포레

11) 해군은 각각의 전력을 융합하면 더욱 큰 시너지를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잠수함 전력과 미사일의 결합은 은밀성을 바탕으로 아축 타격력의 전략적 가치를 배가하는 조치이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전력을 활용한 특수전력의 침투능력 보유는 북한에게 강한 견제효과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다.

스탈은 핵무기 통제권을 두고 대립과 항쟁의 와중에 있는 육·해·공군의 조정이라는 어려운 임무를 맡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해군의 이익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자 조정통제의 어려움¹²⁾에 지친 나머지 퇴임 후, 병원에서 창문으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군을 조정해야 할 장관의 입장에 있었으나, 육군과 해군이 과거 1세기 반에 걸쳐서, 각각 독자적인 경로를 밟아서 발전한 독립왕국으로 성장한 상황에서 육군과 공군의 연합하여 해군에 대항하는 상황이 조성되자 좌절하고 만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해군이 합리적이고 야심찬 전력소요 도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를 예산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따라서 해군의 기획가들은 소요도출 이후에 예산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예산투쟁을 거쳐 무기체계가 획득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전력발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해군 전력발전은 무기체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례로 부대 구조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군사전략 및 해군전략 개념인 ‘공세적 방어’를 구현 가능한 해군의 부대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해역함대와 기동전투단을 유기적으로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즉 해역함대는 대북억제, 적 공격 격퇴, 아 피해 최소화를 구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기동전투단은 조기 공세전환 및 적 중심 조기 공격, 고속기동에 의한 결정적 작전수행, 적 전쟁의지를 마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분업구조를 정착시킬 필요도 있다. 전투교리 분야에서도 합동작전에서 결정적 기여가 가능한 해양전장운영 개념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해군과 공군의 공간관리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중심작전 수행을 위한 표적선정 협조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세심한 조정과 통제의 과정을 거쳐 합동성이 구현되는 상황이라야 원래 의도한 성공적인 북핵 및 비대칭 위협에 대한 해군의 역할 확대가 현실화되는 것이라 하겠다.

12) 이것은 최고 관리자 1인의 역량이나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은 아니긴 했다. 그의 뒤를 이은 6명의 역대 장관들도, 끝내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IV. 결론

바리 포센(Barry Posen)은 일찍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분쟁 초기 양측이 바라보는 전략적 상황에 따라 핵사용 시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래식 전쟁이 핵전쟁으로 이행될 수 있다고 잠정적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1980년대 나토가 유럽 지상전에서 소련에 열세가 예상되는 경우, 미국은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핵무기를 사용하려 했으며, 이때 재래전은 핵전쟁으로의 이행이 거의 확실했다는 것이다. 한편 소련도 미국의 이러한 의도를 간파하고 유럽 전구 내에서 혹은 미 본토를 향해서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프랑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비록 자신들이 가진 핵무기가 소련과 비교해 볼 때 절대적 열세를 보여주었지만 자신의 영토가 침략자에 의해 점령되는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핵을 사용할 것을 공언했다. 이러한 논거의 기초에는 사활적 정치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의 장에서 핵무기와 같이 효용성이 높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남겨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6-8기 또는 20여기 보유하고 있다고 상정할 때¹³⁾, 이를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 것인가를 추정하는 것은 국방기획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 북한의 비대칭 위협도 북한의 핵 능력 때문에 시너지를 얻고 있다.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에 있어 북한 핵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은 지난 7차 당대회를 통해 선군을 넘어 선택의 길로 매진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제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 핵을 다룰 수 있는 레버리지는 군사적 수단을 통한 억제력 확보에서 찾을 수 있을 뿐이라는 판단이다. 북한 핵이 점점 고도화되는 양상으로 치닫는 2016년 현재, 한국군은 군비경쟁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압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군비경쟁은 북한의 비대칭전략 구현을 저지하는 전략적 수준의 군사력 건

13) 2016년 현재 SIPRI 추정에 의하면 북한은 6-8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권태영 외(2014)는 북한이 이미 20여 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설 조치이다. 남북한이 이런 군비경쟁을 진행할 경우 경제력이 취약한 북한은 군비경쟁을 하다 정권이 몰락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군비경쟁 조치는 핵 포기 및 비대칭 전략 포기유도 방안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전략적 기초하에 공세적 해군력 건설과 운용을 주문했다.

적정 수준의 군비경쟁 조치는 북한의 군사적 오판을 막을 수 있고,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군비지출과 경제의 상쇄관계를 고려하여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잘 조율된 군비경쟁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되며 해군력은 이러한 정책에 기여하는 중요한 세력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의 효과를 무위화할 수 있는 바다로부터(From the Sea) 대량의 미사일 화력을 투발할 수 있는 조치,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통한 응징보복력 확보, 특수전 능력 및 북한 특수전 세력을 궤멸시킬 수 있는 (항공)전력 건설은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군비경쟁 조치는 매우 조심스럽게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의 군사도발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고, 협상 재개의 기회를 아예 차단하는 조치가 될 가능성도 높은 전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실효적 수단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태영·노훈·박휘락·문장렬, 2014,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 한국안보문제 연구소.
- 권태영, 박창권, 2006, 『한국군의 비대칭전략 개념과 접근 정책』,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국방정책연구보고서 06-01.
- 김기호, 2014, “김정일-김정은 최고사령관 체제하 북한의 군사력·군사전략의 변화 분석”,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 김재엽·김종하, 2011, “한국의 재래식 억제전략 발전방안”, 『신아세아』 제18권 3호.
- 김정섭, 2015, “한반도 확장억제의 재조명”, 『국가전략』, 제21권 2호, 세종연구소.
- 노 훈, 2013, “북한 핵개발 진전과 시한성 긴급표적처리체계의 발전”, 『주간국방논단』 제1455호, 한국국방연구원.
- 박휘락, 2013, “북한의 비대칭위협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전략”, 『전략연구』 통권 제57호.
- 부형욱, 2016, “미래 한반도 전쟁양상: 새로운 접근”, 『주간국방논단』, 제1602호.
- _____, 2015, “창조국방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 『항공우주력연구』, 제3호.
- _____, 2014, “국가위기 양상의 변화와 대응방향”, 『국방정책연구』, 제30권 1호.
- _____, 2013, “북한위협의 진화에 대응한 국가위기관리체제 발전방향”, 『비상대비저널』, 제1권.
- _____, 2012, “안보위협의 진화와 우리 군의 임무: 다재성을 갖춘 적응군 건설을 위한 시론적 논의”, 『국방연구』, 제55권 1호.
- _____, 2011, “전략기획의 이론적 논의와 실무적 효용성 논의간의 부정합에 관한 고찰”, 『국방정책연구』 제27권 2호.
- 브루스 베넷, 1999, “비대칭적 전략과 한국의 군사기획”, 『전략연구』, 통권 제15호.
- 엄상윤, 2011, 『북한 핵무장의 전략적 유용성과 한계』, 세종연구소.
- 최수동, 2010, 국방경영효율화를위한 국방재원배분체제 발전방향 -합동전략기획·PPBE·획득/유지연계중심-, 국방정책 전문연구시리즈 2010-9, 한국국방연구원.
- 한용섭, 1999, “한반도 위기사태 유형과 효과적 위기관리”, 『전략연구』 통권 제17호.
- 한 희, 2014, “창조국방의 개념과 방향”, 제1회 창조국방 대토론회 발표자료.
- 홍규덕, 2004, “북한화생방무기 위협의 억제와 대응체계 개발”, 『전략연구』 통권 제30호.
- 황진환, 1999,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한국의 위기관리 대책”, 『國際政治論叢』 제39집 2호.
- Bitter, Alexander, 2011, Star Wars Revisited? The Impact of Missile Defense on Strategic Thinking During the Bush-Administration in Rotte, Ralph

and Schwarz, Christoph (eds.) *International Security and War: Politics and Grand Strategy in the 21st Century* (Nova Science Publisher, Inc., New York).

Lieber, Keir A. & Press, Daryl G., 2013, *Coercive Nuclear Campaigns in the 21st Century*, U.S. Naval Postgraduate School.

Simpson, 2012, *War from the Ground Up: Twenty-First Century Combat as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Vego, Milan, 2013, On Military Creativity, *Joint Force Quarterly*, Iss. 70.

Abstract

Directions of ROK Navy's Future Developments in Responding to Asymmetric Threats posed by North Korea

Boo Hyeong-wook*

As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s are growing, there have been numerous discussions to find out effective counter-measures and many official plans and procurements efforts have been established. However, discussions on ROK Navy's roles in countering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s have been taken place very limitedly. Decision makers and military planners put enormous efforts in getting counter-measures, however, most of the options on the table are systems of Army and Air Force. This is true if one looks at components of Kill-Chain, KAMD, and KMPR.

With worsening security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it has been said by many commentators that ROK Navy needs to consider expanding its roles in countering against North Korea's asymmetric military threats. They asked ROK Navy to go beyond the mind-set that has confined Navy's roles in deterring North Korean naval threats. That is, ROK Navy should fight 'from the sea' as well as fight 'on the sea.' If ROK Navy begins to think about fight 'from the sea,' there would be many possibilities for the Navy to be a part of countering North Korea's asymmetric military threats.

In order to pursue proactive roles in countering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ROK Navy needs to consider various options. Massive missile forces, nuclear-propelled submarines, naval special forces may be some of them. With those measures, ROK Navy would launch massive and decisive attacks from the

* Chief of Defense Strategy Research Division in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KIDA).

sea without risking survivability of our forces. Considering North Korean Navy's weakness, it is very probable that sea would be safer place than ground or sky. Expanding ROK Navy's roles and being a proactive deterrent forces against North Korean asymmetric threats would provide very reliable counter-measures to South Korean military. Thus, military planners should think how to take the best advantage of expanded ROK Navy's roles and capabilities against North Korean asymmetric threats.

Key Word : North Korea, Asymmetric Threats, WMD Threats, ROK Navy, ROKN Deterent Strategy

논문접수 : 2016년 8월 31일 | 논문심사 : 2016년 10월 11일 | 게재확정 : 2016년 10월 28일